

#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gwf.or.kr | 2015.07.15.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수유동 80대 자매 사건, 복지사각지대는 여전

##### 01 주요 내용

- 7월 10일 수유동 한 빌라에서 80대 자매가 심각한 상태로 자택에서 발견됨
  - 발견 당시 동생(83)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치매증상이 있는 언니(89)는 탈진상태였음
  - 조카의 제보로 구청직원과 소방관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고 주위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 실제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들은 여전히 존재
  - 2015년 7월 1일자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맞춤형급여제도로 변화하여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
  - 80대 자매의 경우, 동생은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 없이 3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언니는 2년 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책정됨
  - 해당 자매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방문하여 도시락배달을 연계하였으나 실제 대면없이 이뤄졌으며, 폐지와 잡동사니로 인해 이웃들과의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 단순 생계비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복지체계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단순 생계비 지원에 머무르는 복지체계가 문제

##### 02 시사점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는 첫째, 읍면동 인력확충과 효율적인 동 복지가능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읍면동은 형식적인 모니터링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임
- 둘째, 단순 생계지원을 넘어 다양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가 필요
  - 대부분 복지제도가 생계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외 대상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음. 비록 생계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가 최 말단 조직인 읍면동까지 지역 구석구석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줌
- 경기도는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지역단위 사례관리체계를 운영 중으로 보건복지부의 동 복지가능강화사업에 맞춘 체계정비가 필요
  -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읍면동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체계 정비 필요
  - 복지서비스 대상자 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층을 넘어 다양한 욕구가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

읍면동 인력확충과 동 복지가능강화 추진 필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의 확대 요구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 펀딩법) 개정안

### 01 개정 주요 내용

-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크라우드 펀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통과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을 10월까지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예정
- 금번 크라우드 펀딩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 등 일반 투자가 어려운 영역에서 ‘대중’을 통한 자금조달 창구가 새로 마련
  - 투자시점부터 투자자 간 지분매각의 1년간 제한, 투자받는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 매각의 1년간 제한 등 대주주가 투자자를 유인하고 보유한 물량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빠지는 일종의 ‘먹튀’ 방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조항을 신설

**크라우드 펀딩** : 개인·기업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십시일반 모집해 벤처기업의 지분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함. 특히 제도권 금융사나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받기 어려운 벤처 조직이 주로 이용하며,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음

- 일반 투자자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며, 조직 한 곳이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은 연간 7억 원까지 가능함

구분	동일 기업당 투자금액	연간 총 투자 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구비 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 기관투자자	무제한	무제한

### 02 경기도의 시사점

-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의 창업 및 자금조달 등 실질적인 자원 총량 증대를 위한 자원동원 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이 개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자원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경기도 내 유관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필요



- 경기도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I-Bank 등 온라인 자금중개기관의 활용 및 연계 체계 구축
  - I-Bank 등 경기도 내 사회적금융 기관을 활용하여 크라우드 펀딩의 자금중개기관으로서 도 내 사회적경제 분야 참여기업 등을 소개하고, 자금 중개 역할의 수행 방안 고려
- 또한, 경기도가 다양한 복지수요에 혁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STB(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의 사업에서 크라우드 펀딩 활용방안을 고민

크라우드펀딩법의 국회통과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자원 확보가 용이해짐

크라우드 펀딩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02

#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1. 생활임금 조례 제정 현황

최저임금의 낮은 급여 수준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현재 27곳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사회생활, 실질적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함
- 주로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영역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한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있음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례로 정한 조정률(100~130%정도)을 적용해 매년 산정하며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에 반영
- 조례 제정 현황 및 생활임금 수준

지역	지자체	제정	생활임금	지역	지자체	제정	생활임금
경기	경기도	'14.7.11	6810원	서울	서울특별시	'15.1. 2	6687원
	수원시	-	6600원		강동구	'15.6.17	6687원
	김포시	'15.6.10	-		광진구	'15.7.10	-
	부천시	'13.12.12	6050원		구로구	'15.3.26	6738원
	이천시	'14.12.31	5860원		노원구	'14.8.18	7150원
	화성시	'15.6.10	6050원		도봉구	'15.3.12	6970원
인천	계양구	'15.3.27	-		동작구	'15.2.26	-
	남동구	'15.5.15	6790원		서대문구	'15.4.15	6854원
	부평구	'15.1. 5.	6220원		성동구	'15.5.21	6852원
광주	광주광역시	'15.5.15	7254원		성북구	'14.9.11	7150원
	광산구	'14.11.19	6080원		은평구	'15.5.7	-
	서구	'15.4.10	5980원		중구	'14.12.31	-
대전	유성구	'15.3.30	-	전북	전주시	'14.12.30	6060원
세종	세종시	'14.12.22	6567원				

※ 안산시는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성남시는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 2.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결정('15.7.9.)

- 2016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 2009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209시간 근무 기준)

1988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62.5원	690원	1170원	1600원	2840원	4110원	4580원	4860원	5210원	5580원	6030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5)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4%를 차지하며 대부분 청년층과 노년층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등의 기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익 감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확대 등의 우려도 존재함



\*최저임금법 :  
1986. 12.31. 제정,  
1988. 1. 1. 실시

# 03 FACT CHECK

## 영국, 낮은 세금 낮은 복지사회로 패러다임 전환하나?

-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낮은 세금 낮은 복지사회” 로의 전환을 위한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법인세율을 낮추고, 복지비용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발표('15.7.8)
  - 향후 5년간 복지지출 120억 파운드(약 21조원) 삭감
  -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2017년 19%, 2020년 18%까지 인하
  - 소득세가 면제되는 최저 연봉 상한선은 11,000파운드(1,923만원)로 상향
  -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던 지원금은 대출제로 전환
  - 21세 미만에게 제공되던 주택지원금은 폐지
  -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주택수당, 세금환급액 등도 향후 4년간 동결
- 핵심은 고용을 통해 근로자 가족이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일하는 복지사회**” 추구
  -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 임금을 실질적 수준으로 인상  
현재 시간당 6.5파운드 → 2016년 4월 7.76파운드 → 2020년 시간당 9파운드(15,000원)
- 2018년까지 흑자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캐머런 총리의 재선공약이 근로빈곤층, 장애인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지자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세액공제 축소는 한계세율을 높여 근로자를 낙담하게 하고, 시간제 근무를 늘린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복지 삭감을 통한 예산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퇴치를 위한 군비 확대에 쓰겠다는 영국정부의 발표(7.13.)로 복지축소에 대한 반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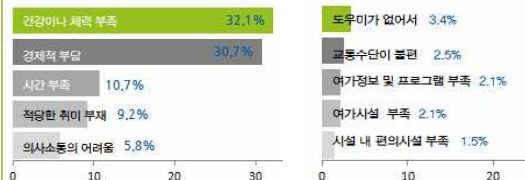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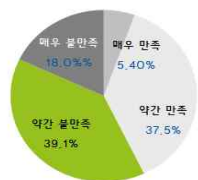
복지정책의 변화는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로 축약할 수 있으며, 고용과 생산 중심의 복지 실현의 성격이 강함

# 04 통계로 보는 복지

## 트레킹과 산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1박2일 추천코스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7.1%를 차지하였음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문화 여가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들이 여행을 통한 즐거운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도입 방안 기초연구(경기복지재단, 2013)”에 선정된 10가지 코스 중 트레킹 코스를 추천
  - 1일 : 남한강 자전거길 휠체어 트레킹(팔당역 → 남한강 자전거길 → 다산 유적지)
  - 2일 : 양수철교 → 세미원 → 두물머리 →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
- 팔당역에서 남한강 자전거 길 5km는 휠체어로 트레킹이 가능하며 다산정약용 생가와 다산 기념관도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음. 아름다운 강변을 따라 세미원에서 두물머리까지 산책 하고 소나기마을에서 소설 속의 주인공도 되어보는 양평 여행 추천 코스임



세미원



다산 유적지